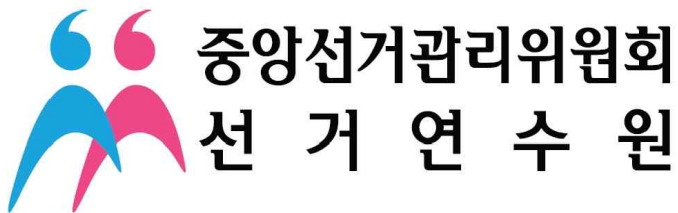

새내기유권자 강의교재



강 의 교 재

제1장 민주주의와 주권

제2장 민주적인 정치과정

제3장 새내기유권자의 정치참여

=== 차 례 ===

학습지도안

- 학습목표 /1
- 학습자의 특성 분석 /1
- 학습자 분석에 따른 교수 방향 /1
- 교재의 내용과 구성 /2

교재내용

제1장 민주주의와 주권

1. 민주주의의 의미 /3
 - 가.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3
 - 나.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4
2. 주권의 의미와 가치 /7
 - 가. 근대 이전의 주권 /7
 - 나. 근대 이후의 주권 /9
 - 다. 주권의 의미와 가치 /10
3. 참정권의 역사 /12
 - 가. 외국 참정권의 역사 /12
 - 나. 한국 참정권의 역사 /13

제2장 민주적인 정치과정

1. 정치의 기능과 정치 해결 과정 /15
 - 가. 정치의 의미와 기능 /15
 - 나. 정치 해결 과정 /16

2. 사례를 통해 본 정치적 쟁점 해결 과정 /18
 - 가. 대체 휴일제 /18
 - 나. 최저 임금제 /18
 - 다. 군복무 기간 단축 /19
 - 라. 학자금 대출 및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20
 - 마. 택시요금 인상 /21

제3장 새내기 유권자의 정치 참여

1. 참여와 정치 발전 /23
 - 가. 대의민주정치와 참여 /23
 - 나. 다양한 정치 참여의 방법 /23
2. 새내기 유권자와 선거 /26
 - 가. 선거의 의미 및 기능 /26
 - 나. 학교선거의 의미 및 중요성 /27
 - 다. 대표자 선택 기준 및 방법 /29
3.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세 /36
 - 가. 정치(선거) 참여의 중요성 /36
 - 나.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자세 /37
 - 다. 실천하는 새내기 유권자 /37

부	록
----------	----------

1. 그림 속 죄수는 누구? 왜 극단적 처형까지? /40
2.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41
3. 인간바리케이트와 총을 든 시민들 /42
4. 최초의 흑인부대 이야기 /43
5. 여성 참정권 전사 에멀린 판크허스트 /45

6. (정책제안) 교통카드 단말기 추가 설치 /46
7. (캠페인) 유기견 보호 활동 /48
8. (합법적 시위) 최저임금 인상 활동 /49
9. (논평)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 /50
10. 나와 맞는 정책 찾기 /51
11. 토니블레이어와 매니페스토 /53
12. 선거에서 '한 표의 의미와 가치' /56
13. 선거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모습들 /62

참 고 문 헌

/67

□ 학습 목표

1.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와 주권의 의미를 알 수 있다.
2.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정치참여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3.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 민주시민사회 발전에 필수요소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 학습자의 특성 분석

1.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 [8단원: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에서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에 대해 학습한다.
2. 고등학교 수능 선택과목으로 [법과 정치] 교과를 선택한 학생만이 민주 정치와 법,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에 대해 심화 학습한다.
3. 교과 구성 및 수능 시험 출제 경향상 정치 전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습득이 주를 이루므로 가치와 태도의 측면을 함양할 기회가 적었다.
4. 고3 수험생들은 졸업 후 실제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기회를 가지게 된다.
5. 따라서 그동안 학교 수업에서 부족했던 적극적인 정치 참여 태도를 길러주기 위하여 주권의 의미에서부터 참정권을 얻기까지의 역사, 실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 전반적인 학습을 토대로 학생들 스스로 정치 참여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다.

□ 학습자 분석에 따른 교수방향

1. 학습자들의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하고 주권의 의미, 참정권의 역사, 정책 결정과정 등의 개념 및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도록 한다.
2. 학습자들의 경험과 실제 생활들을 연관지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쟁점 사례와 대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풍부한 사례들을 활용한다.
3.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대한 자료 제시와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 교재의 내용과 구성

단 원 명	주요 학습 내용	비 고
<p>제1장 민주주의와 주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 주권의 의미와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이전의 주권 - 근대 이후의 주권 - 주권의 의미와 가치 ○ 참정권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참정권의 역사 - 한국 참정권의 역사 	
<p>제2장 민주적인 정치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의 의미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와 광의 구분 - 정치의 3가지 주요 기능 ○ 정치해결 과정 : 이스턴 정치체계론 ○ 정치적 쟁점 해결 사례 및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점 이슈 소개 -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 	
<p>제3장 새내기유권자의 정치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의 의미 : 학생회장 선거 소개 ○ 대표자 선택 기준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의 기능 - 대표자 선택 기준과 방법 ○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활용한 참여 - 정책제안, 집회 등을 통한 참여 ○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참여의 중요성 - 바람직한 정치참여의 자세 - 새내기 유권자의 실천 의지 유도 	

제 1 장 민주주의와 주권

1.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 생활을 운영하는 방향에 관한 신념이나 목표를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전자는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후자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존중,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가.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민중의 힘’, 혹은 ‘민중의 지배’라는 의미¹⁾로 출발해 현재 많은 국가들의 통치 이념으로 존재한다. 민주주의 정치 형태라는 것이 단지 ‘국민에 의한 통치’, ‘선거’, ‘다수결’ 등으로 설명하기에는 다른 정치 형태와 구분 짓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특성상 어떠한 체제에나 함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적이지 않은 정치 형태의 특징들, 비민주적 정치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의 특징을 반추하는 것이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첫째, 민주주의는 절대주의, 절대군주, 폭군 또는 독재자와 대립된다.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 독재자인 히틀러는 그의 연설에서 자신의 통치

1) 원래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민중(民衆)’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라는 단어와 ‘권력’ 또는 ‘지배’를 나타내는 크라토스(kratos)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민중의 힘’, 혹은 ‘민중의 지배’라는 의미였다. 즉 한 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하였다.

방식이나 독일의 정치 형태를 두고 '독일적 민주주의'라고 칭하며 그의 통치를 민주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히틀러는 독일의 군사 및 행정권을 모두 장악했을 뿐 아니라 나치당 이외의 다른 정당을 모두 해산시키며 복수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습은 '독재자에 의한 지배'이기에 비민주적이며 당시 독재의 틀 안에서 시행되었던 선거, 다수결 등은 모두 비민주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민중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 정치형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둘째,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비민주적 정체(政體)로 대표되는 절대주의나 전체주의는 그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통치권이 국민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거나, 국민의 정치가 아닌 특정 인물의 정치가 된다. 진정한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그 주권자와 발휘자, 목적이 모두 국민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에는 권력분립, 입헌주의, 다수결제도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비민주적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립의 원리, 그러한 통치 원리를 헌법으로 명시해놓은 입헌주의, 마지막으로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도 국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다수결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을 때 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나.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란 국가, 사회 및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기에 보통사람들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그에 따른 가치나 이념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었다.

작게는 한 가족의 휴가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크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것이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모습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을 위한 조건으로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모든 사람이 불평등이나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원리가 필요하다.

□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2)

- **주인의식** : 공동체 생활에 관련된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마음가짐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참다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다수결의 원리** : 다양하게 표출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들을 다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가정 아래 통합·조정하는 과정.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으며, 소수의 의견도 정당할 수 있으므로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회의 공공의사를 만들어내는 원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 **비판과 타협** :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민주 사회에서는 어떤 일에 대한 각자의 시각과 인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나 정책 결정권자의 결정이 절대적일 수 없다. 따라서 민주 시민은 올바른 비판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판은 타인이나 자신의 주장에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게 되면 사회는 분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비판과 함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타협이 필요하다. 타협은 특정한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조정함으로써 대립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 **관용** : 관용이란 자기와는 다른 타인의 이질성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타인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인의 비판을 검토하여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관용은 타인과의 공존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자세인 것이다.

2) 윤용탁 외 10인, 1996, 『고등학교 정치』, 한국교육개발원

TIP.

□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사례

Q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 2) 정부의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 매키버(R.M. MacIver, 1882~1970)의 '우리가 지켜야 할 성벽'에서 -

□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사례

: 방과 후 학교 만족도 조사(가정통신문)를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학부모 학생 의견수렴과정

가정통신문 2013학년도 제1기 방과 후 학교 만족도 조사

문항	설문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학생)방과후학교가 나의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학생)방과후학교가 나의 학업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학생)앞으로 방과후학교에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학부모)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학부모)방과후학교가 자녀의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학부모)방과후학교가 자녀의 학업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학부모)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투표하기

되돌아가기

2. 주권의 의미와 가치

가. 근대 이전의 주권

주권의 개념은 주권 행사와 그 대상 즉 대표의 등장 과정과 함께한다. 따라서 근대 이전의 주권 개념은 당시의 국가 형태와 대표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로마와 같은 고대 국가에 있어서는 근대 국가에서와 같은 대표의 관념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견해이다. 그리스의 국가형태는 하나 또는 몇 개의 도시국가 형태로서, 각 도시의 시민들은 곧 도시 동맹의 민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자신들의 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었고 대표의 개념도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 그리스나 로마의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대표의 관념이 나타나게 된다. 원로원제 시기에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국민의 행위로 간주되거나 국민의 전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을 자신의 대표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이 이후 중세·근세의 대표 사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라 모든 국민의 직접 참여가 어려워지고 전 국민의 소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지자 그들을 대신하는 기관과 지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후기 로마시대에 들어서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대표 기관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게 된다.

이후 중세에는 어떠한 대표의 관념도 나타나기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 국가 형태는 그리스·로마의 일원적 통일 국가 형태에 비해 왕·영주의 통치로 이원화된 광역국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도시의 등장과 도시의 대표를 선출, 도시 대표의 영주회의 참여와 같은 계기로 대표의 관념이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중세 사상에 있어 명목론³⁾의 등장은 대표를 위임으로 보는 기초적인 이론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표자를 통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이밖에도 중세 말에 입헌정부의 기초를 마련해 준 모든 요소들, 로마법의 부활이나 독일 시민법의 전파 등과 같은 요소들이 대표를 위임으로 보는 새로운 시점의 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중세의 입헌사상은 기독교의 평등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신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이 곧 대표 선출과 입법 과정에서의 만인의 평등으로 인정받게 되는 기반이 된다.

TIP.

□ 근대 이전의 주권 사례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국회의원?)

아테네에서는 10만명, 100만명 등 사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직접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결정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뽑게 되었는데 그 대표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윤번제(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하는 방식), 추천 등에 의한 공직순환을 통해 정치적 참여의 공간이 구성되고 정치권력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한번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지요. 다만, 당시 여성, 노예 등은 참정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현대의 민주주의와 다른 점입니다.



3) 사회명목론 [社會名目論, social nominalism] 사회란 오직 이름뿐이고 실재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보는 사회본질론. 사회유명론(社會唯名論)이라고도 부르며, 사회에 대하여 개인이 우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사상사적 계보에서 보면 공리주의(功利主義)와 개인주의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인식론상으로는 감각론(感覺論)과 통한다.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하우동설)

나. 근대 이후의 주권

근대 이후 시민혁명과 사회계약설을 통해 국민주권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17세기 의회 정치를 확립한 영국의 명예혁명, 1776년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독립 혁명, 1789년 절대 군주의 억압에 항거한 프랑스의 대혁명 등의 시민혁명은 새로운 정치 형태와 더불어 국민의 주권을 몸소 행한 계기가 되었다.

<각국의 시민혁명과정>

국 가	전 개 과 정
영 국	㉠ 청교도 혁명(1649) : 의회의 권리 청원 제출 ⇨ 왕당파와 의회파간의 내전 ⇨ 의회파의 승리 ⇨ 국왕의 처형, 공화정 수립 ㉡ 명예 혁명(1688) :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 제임스 2세의 도주 ⇨ 권리 장전의 승인,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정치의 기틀 마련
미 국	미국의 독립 혁명(1776) :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 ⇨ 보스턴 차 사건 ⇨ 영국 정부의 강경 대응 ⇨ 대륙 회의의 개최 ⇨ 독립 선언문의 발표 ⇨ 파리 조약의 체결 ⇨ 세계 최초의 민주 공화국 탄생
프랑스	프랑스 혁명(1789) : 구제도의 모순 ⇨ 삼부회 소집 ⇨ 국민 의회 구성 ⇨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 인권 선언 채택 ⇨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고, 시민 계급이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됨.

그리고 홉스, 로크, 루소로 대표되는 사회계약설은 각각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국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신들을 통치할 대표자나 국가를 만드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인식과 함께 국민주권의 원리는 민주정치의 근원적 가치로 인정된다.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4) 윤용탁 외 10인, 1996, 『고등학교 정치』, 한국교육개발원.

□ 각국의 시민혁명과정 관련 사례들

- 그림 속 죄수는 누구? 왜 극단적 처형까지? : [부록 1] 참조
-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 [부록 2] 참조
- 인간 바리케이트와 총을 든 시민들 : [부록 3] 참조

다. 주권의 의미와 가치

주권은 국가의 최고의사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으로써 모든 권력에 상위하는 근원적인 힘(헌법제정권력)이며,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⁵⁾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확립 과정이 곧 주권을 확립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그 과정은 앞서 설명했던 근대 이후의 혁명의 과정과 1945년 이후 신생 독립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 잘 나타난다.

근대 이후 절대왕정으로부터의 억압, 식민지배의 부당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몸소 실천한 과정은 국민주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 절대 권력을 지닌 자에 의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혁명과 투쟁을 감수할 정도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주권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1945년 이후 강대국들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며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던 신생국들은 민주주의의 경험·발전 역량 부족으로 대부분 독재정치로 전락하거나 군부 쿠데타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억압당함은 물론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인 주권을 빼앗겼으며,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민주주의 정체(政體)를 가진 국가에서도 주권은 지켜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 주는 예이다.

5) 권영성, 1989, 『신헌법요론』, 형설출판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곧 주권은 자신을 바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지켜졌다는 의미이다. 주권의 가치가 인정되고 보다 많은 영역에서 발휘되는 지금, 주권자로서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주권을 지켜야 할 때이다.

TIP. 주권을 찾기 위해 희생한 윤봉길 의사가 자녀들에게 남긴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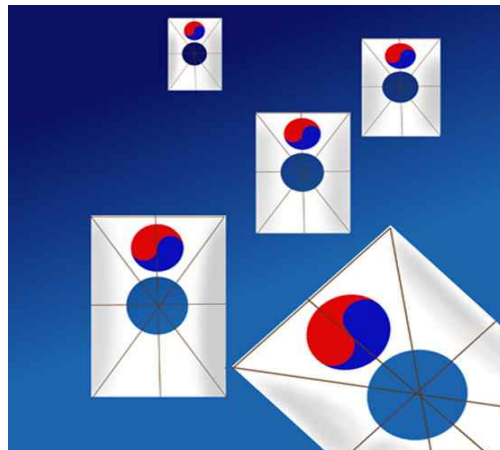
강보에 싸인 두 병정(兵丁)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어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화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에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3. 참정권의 역사

가. 외국 참정권의 역사

유럽에서 혈통 대신 재산을 참정권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중세 말 상업과 산업이 번창한 이후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때까지도 참정권의 제한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인권 선언 이후의 헌법 제정 작업에서조차 '능동적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주기로 했을 정도였다. 여기서 능동적 시민의 요건은 '최소 사흘치 노임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내는 사람'이었다.

의회 정치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영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9세기 초반 하더라도 선거권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는데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했다. 오늘날과 같은 의회 정치의 뼈대를 갖추는 데는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참정권 확대 과정>

연도	국 가	선거권자의 범위	비 고
1832	영 국	산업 자본가, 중산층	
1848	프랑스	남성만의 보통 선거	
1867	영 국	도시 소시민, 노동자까지 확대	
1870	미 국	남성만의 보통 선거	
1884	영 국	광산 노동자, 농민까지 확대	
1920	미 국	여성까지 확대	

위 표에서 나타나듯 국민주권이 인정된 이후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 참여 권한을 부여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참정권을 획득하는데 바쳐진 희생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참정권 관련 사례들

- 최초의 흑인부대 이야기 : [부록 4] 참조
- 여성 참정권 전사 에멀린 판크허스트 : [부록 5] 참조

나. 한국 참정권의 역사

한국 참정권의 역사는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과 대통령 간접선거 시행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이후 1952년 1차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여 참정권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으나, 1954년 2차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종신 대통령제의 길을 열어 놓고, 이는 곧 3.15 부정 선거로 이어지게 되어 참정권의 숭고한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었고, 국민들은 그에 대한 저항으로 1960년 4.19혁명에 나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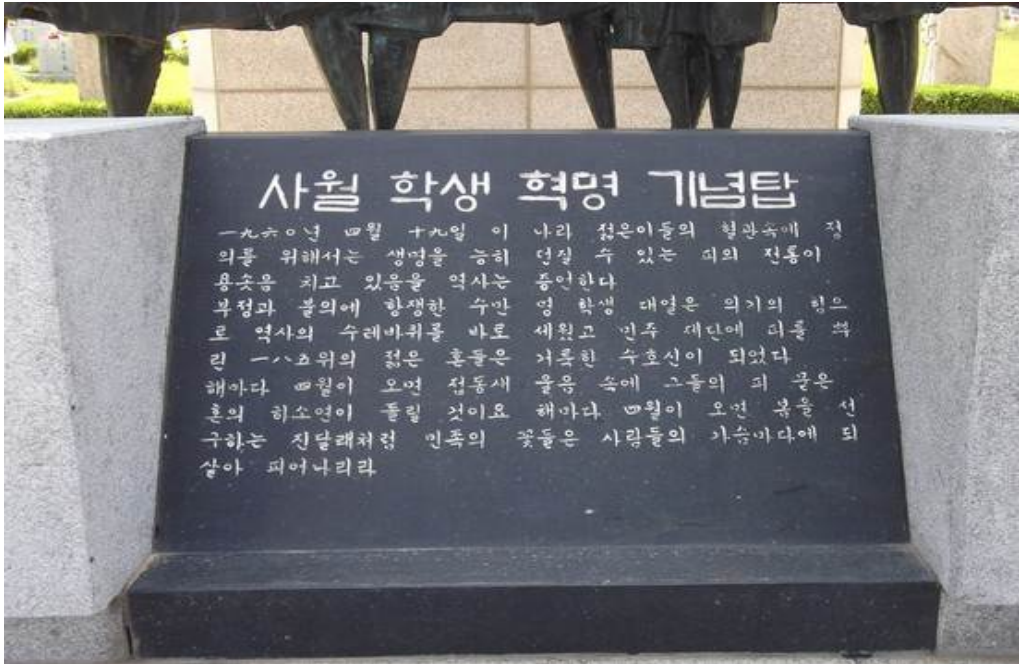
4.19혁명의 기운을 이어받아 민주주의 발전 및 참정권의 확대 조짐이 보였으나 여러 차례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1972년 7차 개헌(유신 헌법)으로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를 도입,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참정권의 후퇴를 가져온다.

이후 1980년 8차 개헌(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기가 7년 단임제로 바뀌었으나, 선거방식에 있어서는 대통령선거의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참정권 제한 상태가 지속된다.

결국 1987년 6월부터 국민들은 스스로 참정권 등을 되찾기 위한 민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1987년 9차 개헌(제6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를 이끌어냄으로써 현재의 같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정착된 것이다.

TIP.

□ 4.19혁명 기념비에 새겨진 글 (국립 4.19기념관)



1960년 4월 19일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혈관 속에 정의를 위해서는 생명을 능히 던질 수 있는 피의 전통에 용솨음 치고 있음을 역사는 증언한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한 수만 명 학생 대열은 의기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웠고, 민주 제단에 피를 뿌린 一八五위의 젊은 혼들은 거룩한 수호신이 되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접동새 울음 속에 그들의 피 묻은 혼의 하소연이 들릴 것이요, 해마다 4월이 오면 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되살아 피어나리라.

[1963. 9. 30. 시인 이은상]

제 2 장 민주적인 정치과정

1. 정치의 기능과 정치 해결 과정

가. 정치의 의미와 기능

서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청소년에게 정치란?’ 한 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물었더니 53%의 학생들이 ‘비리, 부정부패, 믿을 수 없는 것, 줄서기, 약육강식 등’의 부정적인 답변을, 35%의 학생들이 참여,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 바른 생활 등 긍정적인 답변을, 나머지 12%의 학생들은 ‘모르겠다. 관심없다’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학생들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치는 곧 정치인의 활동이라고 한정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며, 소수의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모든 정치에 대하여 평가하는 잣대로 이용되는 것이다.

물론 “정치는 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이다.”라고 좁은 의미로써의 정치를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로만 정치를 이해할 때 정치는 국민과 동떨어진, 국민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 되고 만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져 개인의 삶은 위협받고 사회는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넓은 의미에서 정치라고 부르고, 이런 광의의 의미로 정치를 함께 이해할 때 정치는 우리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정치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간 집단 등 모든 사회구성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가장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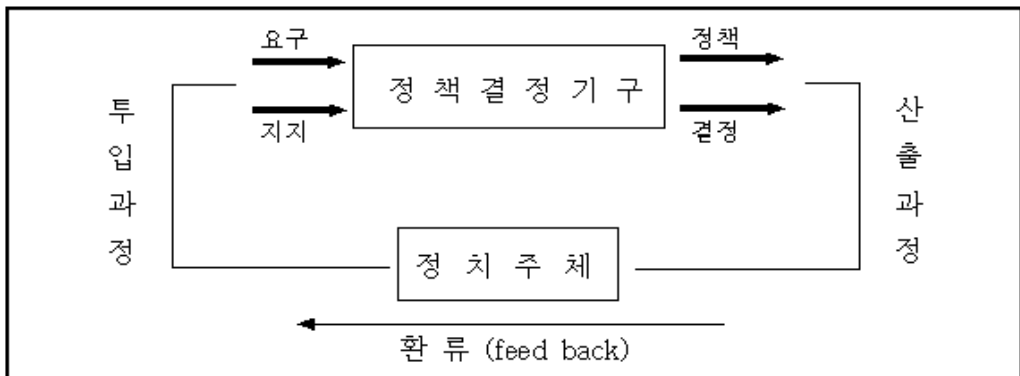
둘째,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기능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나가며, 바람직한 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규범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나. 정치 해결 과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큰 흐름이 나타난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미국의 정치학자 이스턴이 제시한 정치 체계론은 다양한 정치 행위자들이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상호작용해 나가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i) 투입 과정은 국민이 국회·정부 등 정치권에 보내는 일체의 정치 행동으로 요구와 지지로 나타난다.

ii) 요구와 지지는 정책 결정 기구를 통하여 정책(또는 관련 법안) 또는 정부의 결정이라는 산출 과정으로 나타난다.

iii) 산출된 정책이나 정부의 결정에 대한 또 다른 국민들의 반응은 정책의 지지 또는 반대 등 환류과정으로 나타난다.

이 모형에서 보다시피 국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체제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정부, 의회 등)들의 대표자들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성되는데 이 역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정치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바로 우리의 현실에 깊숙이 관여된 것임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 제시하려고 한다.



2. 사례를 통해 본 정치적 쟁점 해결 과정

가. 대체 휴일제

그동안 설날,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따로 휴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안전행정부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겹치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 휴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 휴일제는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대립되는 쟁점이었다. 노동계에서는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노동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재계에서는 대체 휴일제 도입으로 인한 근무일 감소로 인한 손해, 유급휴일에 대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대체 휴일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이후 당정회의를 거치면서 2014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국민의 요구 : 대체휴일제 도입 찬성
- 갈등 관계 : 노동계 VS 재계
- 정책 결정 기구 :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정당과 정부
- 산출 :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 도입·시행

나. 최저 임금제

최저 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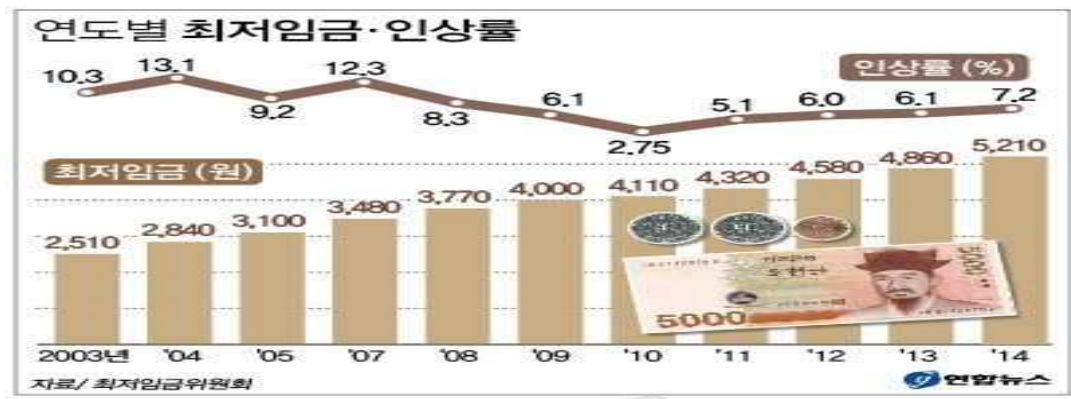
6) 대한민국 정부, 2010, 시사경제용어사전.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돼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최저 임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저 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월 101만5,740원이다. 2014년 최저임금은 2013년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 국민의 요구 : 최저임금제 인상
- 갈등 관계 : 노동계 VS 재계
- 정책 결정 기구 : 국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 산출 : 2014년 최저임금 인상 전년대비 7.2% 인상
- 환류 : 최저임금제 더 높은 인상률 요구



장예진 기자 / 20130705 @yonhap_graphics(트위터)



다. 군복무 기간 단축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남자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지워진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젊은이들은 군복무 기간 단축 논의가 들려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은 저출산현상이 심화되는 지금의 시기에 경제생산활동 인구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오히려 복무 기간 단축이 전투 숙련도 약화로 이어져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군복무 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관 사무이며, 정기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시행될 것이다.

- 국민의 요구 : 군복무기간 단축
- 쟁점 : 경제적 관점 VS 안보적 관점
- 정책 결정 기구 : 국회(국방위원회)

라. 학자금 대출 및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다.⁷⁾

그런데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군에 입대하는 경우 복무 기간에도 이자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2013년 4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⁸⁾

이 개정안은 동년 5월 10일자로 시행되어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7) 법률 제9935호, 2010 1. 22. 공포·시행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참조

- 국민의 요구 : 군에 입대한 학생들의 이자 납부 기간에 대한 개선
- 정책 결정 기구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산출 : 군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면제



마. 택시요금 인상

지난 2013년 5월 21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 주최로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광장에서 열렸다. 그동안 국민들의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시에서는 4년째 동결돼왔던 택시 요금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

9월 24일 ○○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요금조정안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의에서 택시요금 인상 수준을 심의·확정하였고, 10월 12일부터 기본요금은 600원 오른 3,000원으로 시행되었다.

- 요구 : 택시업체의 택시요금 인상
- 정책 결정 기구 :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 산출 : 기본요금 600원 인상
- 환류 : 관련업계 환영, 국민들 공공요금 상승 우려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사례에서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경제적 활동(최저임금제), 공공요금, 교육(학자금 대출), 여가(대체 휴일제), 국민의 의무(군복무 기간 단축) 등이 누군가의 명령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합법적이고,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것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 의료보험 문제, 연금 문제, 등록금 문제 등등 대부분의 사안 역시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다.



제3장 새내기 유권자의 정치 참여

1. 참여와 정치 발전

가. 대의민주정치와 참여

대의민주정치에서는 시민의 의사가 공공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시민은 대표를 선출하거나 특정 공공문제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 이외에는 정치 과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시민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시민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데 현대 산업화 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대의민주정치의 위기⁹⁾가 대두되면서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참여의 활성화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정책을 결정하도록 대의민주정치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공공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시민의 주권의식을 신장하는 등 민주정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한다.

나. 다양한 정치 참여의 방법

1) SNS를 활용한 참여

선거(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로서 민주 정치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횟수는 일생에

9) 대의민주정치의 위기란, 시민의 대표로서 공공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전담해야 할 입법부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방대한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전문적 관료 집단인 행정부가 공공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서 수십 번 내외가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일상은 늘 정치의 영역에 놓여 있으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정치에 참여하는 첫 걸음은 무엇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관심이 있어야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노력을 기울여 찾아보게 되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만들어 낸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해서 살아간다. 그러한 환경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SNS(Social Network System)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특정한 관심사나 활동들을 공유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SNS를 위시한 인터넷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급격한 정보의 확산,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의 강화,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은 새내기 유권자들의 정치사회화¹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¹¹⁾

주변 사람들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판단 근거를 정리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개인은 정치적 안목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SNS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민의 여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방대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 사이에서 시민들은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 선별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2) 정책제안, 청원, 합법적 시위, 집회 등

SNS를 통한 정치 참여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것이라면, 정책제안·청원·캠페인·합법적 시위·집회 등은 보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정치참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0)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정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갖는 태도·신념·가치관·규범·행동양식을 말한다.

11) 이정교·하승태, 2012,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이용 유형이 이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청소년 연구』 제23권 2호,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예컨대, 내릴 때 버스 뒷문에 카드단말기가 한 대 뿐이어서 불편하므로 늘려달라는 어느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버스마다 카드단말기를 두 대씩 설치하였다고 한다.

또한 서울지역 어느 청소년 봉사단은 '유기견 보호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동물 학대 등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청소년 스스로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 육성을 위해 제정된 청소년 헌장에서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부터 주어진다.

이에 청소년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소년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일부 정당과 인권위, 시민단체 등에서도 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일상의 영역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조금씩 실천으로 옮기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정치효능감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 이후 더욱 더 정치참여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제안) 교통카드 단말기 추가 설치 : [부록 6] 참조
- (캠페인) 유기견 보호 활동 : [부록 7] 참조
- (합법적 시위) 최저임금 인상 활동 : [부록 8] 참조
- (논평)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 : [부록 9] 참조

2. 새내기유권자와 선거

가. 선거의 의미 및 기능

선거(選舉)는 주권자로서 시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즉 선거는 투표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식적인 과정으로, 시민이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참정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한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거는 민주 국가에서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하며, 선거권의 행사는 시민으로서 권리이지만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시민의 의사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대표자에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가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선거에 의한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지지를 기초로 하기 있기 때문이다.

셋째,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를 다음 선거에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 의한 대표자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몸소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학교선거의 의미 및 중요성

선거(選舉)는 투표를 통해 자신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학생들 중에는 ‘우리에겐 아직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는 어른이 돼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며 선거에 대해 무관심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생들은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미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다. 그 중에 학생회 임원 선거가 그러하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자.

아침 등교길 교문 양 쪽에는 피켓을 든 친구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다. 학생들이 교문을 통과하자 큰 소리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한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000입니다. 일꾼처럼 일하고 일개미처럼 노력하는 기호 1번을 기억해 주세요.”

“굿모닝, 기호 2번 000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학교 생활의 어려움들을 짊어주는 효자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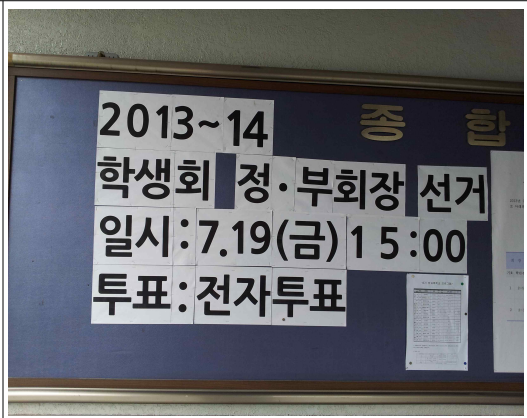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과 그들을 돕는 학생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자기들을 알리고자 여념이 없다.

A : 어, 선거 유세 하네. 넌 어떤 후보가 마음에 들어?

B : 글썄, 인물은 2번이 좀 낫지 않아? 등직해 보이는데... 근데 두 후보 공약이 비슷해. 별로 차별화 되어 보이지 않는 걸. 넌 어때?

A : 나도 잘 모르겠어. 생활복 반바지 공약은 작년에도 있지 않았어? 솔직히 학교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거 아냐? 아, 모르겠다. 기호 1번이 내 친구의 친군데 웬만하면 아는 게 좋다고 재 찍지 뭐. 넌?

B : 아, 몰라. 그 때 가 봐서 결정하지 뭐. 늦겠다. 얼른 들어가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치러지는 전교 학생회장 선거는 실제 국가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 ⇨ 후보자 등록 신청 ⇨ 선거운동 ⇨ 투표 ⇨ 개표 ⇨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입후보한 후보자들도 실제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공약을 만들어 포스터를 게시하고, 등·하교길 교문이나 각 학급 교실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유세활동을 벌인다.

학생들은 일상 중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학교라는 삶의 터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주장하게 된다.

학생들 한 명 한 명 목소리가 대표자를 통해 모아지고, 그 대표자는 학교 상황에 맞게 학생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험을 통해 '학교의 주인은 학생, 바로 나'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회에 나와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 바로 나'라는 주권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 생각해 보기

Q : A학생과 B학생은 각각 학생회장 선택 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려고 하는가?

☞A학생 : 인맥(아는 사람)

☞B학생 : 이미지(듬직한 모습)

Q : A학생과 B학생의 대화 중 대표자 선출을 위한 유권자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A학생 : 공약이 차별화 되어 보이지 않는걸.

☞B학생 : 생활복 반바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거 아냐.

⇒대표자 선출에 있어 인물이나 주관적 기준에 치우치기 보다는 공약이나 정책 등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대표자 선택 기준 및 방법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선거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원(광역/기초)선거, 교육감 선거 등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선거가 참 많다.

이와 같이 거의 매년 선거가 치러지므로 새내기 유권자가 매년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유권자들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각자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가 심사숙고를 한 뒤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를 찾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의 기능과 정치해결과정에서의 선거(투표)는 사회 전체 및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은 예능방송에서 ‘어떤 음식 먹고 싶은가요? 원하는 음식에 문자투표를 해 주세요’라는 말처럼 단순히 기호에 맞추어 쉽게 의사 결정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1) 대표자를 선정하는 기준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 물론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격이 비쌀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일수록 신중히 생각한 뒤 구매한다.

경제 영역에 있어 자신의 결정에 최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 꼼꼼히 따져보고 가격을 지불하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정치 영역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유권자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는 참정권 역사에서 보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값으로는 절대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대표자를 잘 뽑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표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새내기 유권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있어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스마트 폰 구매하기와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시 ○○고등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디자인(26%), 가격(25%), 기능(20%)순으로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이 외에도 브랜드, 품질, AS여부, 최신상품, 크기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스마트폰과 대표자 선택 기준의 비교>

스마트폰 선택 기준 (학생들의 설문조사)	대표자 선택 기준 (일반적인 투표행태)	비 고
디자인	호감도, 이미지	
브랜드	정 당	
품질	자질, 능력	
기능	공 약	

2) 대표자를 선택하는 방법

①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후보자의 이미지’를 비교해 본다.

예전 우리 사회가 물건을 튼튼하게 잘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현대 사회는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세련되게 잘 꾸며져 있는가를 중요한 가치로 꼽는다.

보이지 않는 안의 내구성만큼이나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그렇듯 대표자를 선택할 때에도 경력, 업적이라는 객관적 정보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 호감도’ 라는 외관(주관적 느낌)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선거 유세 때 직접 현장에서 후보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권자들은 대개 언론을 통해 후보자를 접하게 된다. 특히 대중매체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선거 전략으로 정치 광고 등 대중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제품의 속성이나 기능을 일일이 설명해주기 보다 매력적인 이미지만을 보여주는 일반 제품광고처럼 정치 광고 역시 후보자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레 드러내기보다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가질만한 이미지들을 종종 극적으로 연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보자가 그간 이야기 해왔던 발언들과 행동을 찾아보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능력이나 자질에 부합하는 등 올바른 검토가 필요하며, 대표자 선택에 있어 피상적인 이미지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높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② ‘스마트폰의 브랜드’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교해 본다.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다. 회사마다 브랜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면 믿고 살 수 있어’ 라는 신뢰감과 함께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단순히 상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책임자나 구매자에게 그 품질이나 기능을 보증하는 것이다.¹²⁾

정당¹³⁾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자발적 조직 결사체로서 공직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치에서도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신뢰감도 그 정당에 비례하여 높게 나타난다.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정당의 공천 심사를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거치게 되고, 정당에서 제시하는 공약들을 그 후보자가 실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자질 등을 검증하여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전국의 유권자들이 투표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국 차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은 후보자 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

12) 매스컴대사전, 1993,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

13)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정당법 제4조)

평소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어느 정당에서 만들어내는지 관심을 가지거나 선거 때 시민단체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정책도우미로 만든 ‘나와 맞는 정당 찾기’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시민단체 운영 ‘나와 맞는 정책 찾기’ : [부록 10] 참조

③ ‘스마트폰의 품질’과 ‘후보자의 자질’을 비교해 본다.

품질은 상품의 질, 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다.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정치를 잘할 기본 바탕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 살펴보는 것이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 상황(배우자와 직계의 재산 포함),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 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이 나와 있다.

재산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는지, 후보자가 남자라면 병역을 제대로 마쳤는지 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면제를 받았는지, 납세의 의무를 다했는지, 범죄 사실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한 사람의 자질을 짧은 몇 페이지의 인쇄물을 통해 판단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나, 이와 병행하여 언론 등에 보도되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등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질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속한 단체·협회에 이익이 되는 사적인 공약을 내걸었는지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를 대표하는 자는 보다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마음은 당연하다.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해 온 사람이라면 국정을 맡겨도 책임있게 운영할 것이다.

④ ‘스마트폰의 기능’과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본다.

사람들은 물건을 고를 때 그 기능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물건의 기능이 아무리 많고 좋다고 해도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이라면 그다지 쓸모가 없듯이, 선거에서 후보자가 내건 공약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유권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공약이 아니라면 그다지 호응을 받을 수 없다.

후보자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은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들이 실현되기 위하여 후보자를 선택한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1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성별, 계층, 직업 등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기도 한다.

당선되면 다해 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버린 사례들도 종종 나타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를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일종의 선거공약이지만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 조달 방안을 담아 공약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추고 있다.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의 평가기준인 SMART 지수를 후보자 선택 척도로 삼을 수 있다.

SMART 지수란 구체적 내용으로(Specific), 검증 가능해야 하고(Measurable), 달성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Achievable), 충분한 타당성을 갖춘 동시에(Relevant), 마지막으로 이행에 필요한 기한(Timed)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 토니블레어와 매니페스토 : [부록 11] 참조

3) 대표자 선택의 우선 순위

대표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정책과 공약을 높이 평가하지만 ‘제18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시 고려요인’을 사전 조사한 결과,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인물·능력보다는 정책·공약에 비중을 두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정책·공약보다 오히려 개인의 인물·능력에 비중을 두어 투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후보자 선택에 있어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해야 하나, 그 중에서도 정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실천할 책임자로서의 후보의 능력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실현가능한 정견·정책(매니페스토)을 준비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더라도 갑자기 유권자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을 중시하는 영국의 경우 각 서점에서 정당의 매니페스토(정책공약집)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2.5 파운드(약 4,600원)인데 이 책자는 수십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투표가 아닌 각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간간하게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3.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 자세

가. 정치(선거) 참여의 중요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 참여의 형태는 그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시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 청원, 캠페인, 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며, 이는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다. 투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치 참여의 형태이다. 특히, 현대와 같은 대의민주정치 아래에서는 투표야말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선거는 시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 이므로, 선거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무책임한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 풍토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고,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가져오게 되며, 나아가 민주 정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 정치는 정치적 주권적 지위에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다.

TIP.

□ 선거에서 ‘한 표의 의미와 가치’ 생각해 보기

수능을 치른 새내기유권자들이 대학교 입학 시험 시에 끝으로 합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정해지듯이 선거에서 한 표의 의미와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 역사적인 사례를 찾아서 살펴보자.

□ 선거에서 ‘한 표의 의미와 가치’ : [부록 12] 참조

나.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자세 14)

시민의 정치 참여는 개인적인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공 이익 증진에 기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참여가 정치 발전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자신이 주권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 과정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사회에 대해 주권의식을 얼마만큼 갖느냐의 문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름길이 된다.

둘째, 참여를 통해 사익은 물론 공익을 조화시키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사회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모두 추구하는 방향으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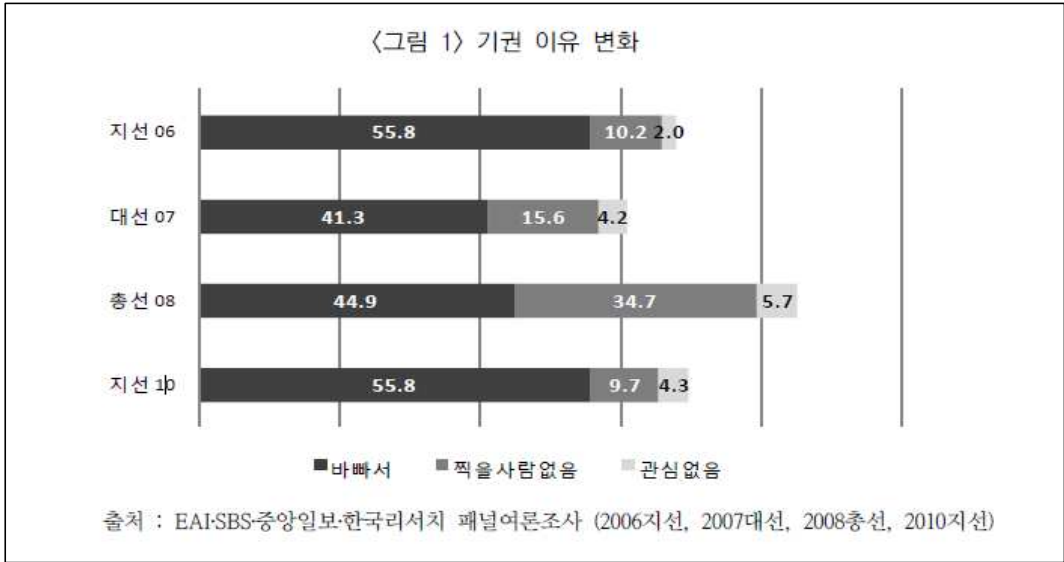
셋째,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정치 참여는 사회 안정을 깨뜨려 정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합의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실천하는 세내기유권자

‘기권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이자 내 권리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동원되어 강제투표를 하는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에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선 기꺼이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몇 차례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개인일이 바빠서’였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라는 이유를 대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정치(선거)를 하는 것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해도 상관없다는 태도이기도 하다.

14) 『고등학교 사회』, 금성출판사.



국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를 쉽게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강제)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세계 약 30개국)도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투표에 불참하는 선거권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벌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고대 아테네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페리클레스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를 아테네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 아테네인만이 직접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정책을 올바르게 철저하게 숙고한다.”라고 말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가 아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에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젊었을 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일수록 투표를 마치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게 될 확률이 높고, 이전 선거에서 참가한 사람은 다음 선거에 참가할 확률이 높다¹⁵⁾는 연구 결과가 바로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곧 투표는 습관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15) 최연혁, 2010, “스웨덴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시민교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막 사회를 나서는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만 무엇보다 내 삶을,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바꿀 가장 강력한 수단인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을 소중히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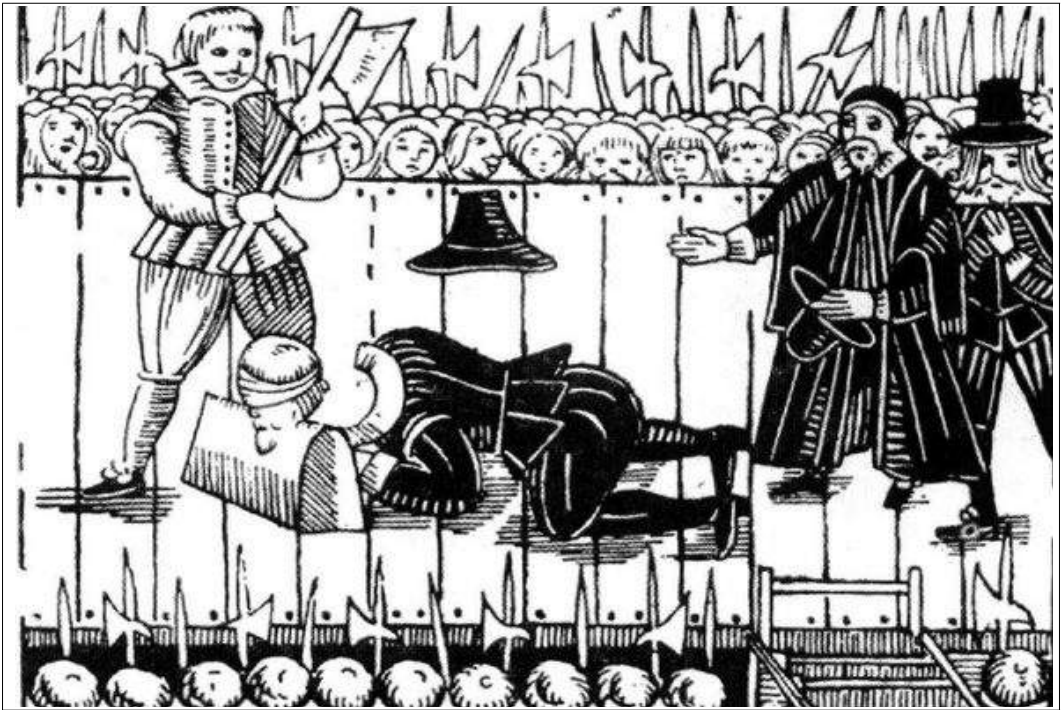
우리는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으로 비유한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은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절실하며 선거가 곧 국민주권 실현의 기본적 수단이자 핵심이다. 그 꽃이 싱싱하게 피워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지, 시들어버려 국민들에게 외면당할지 그것 역시 국민들 손에 달려있다.

□ 선거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모습들 : [부록 13] 참조



[부록 1]

그림 속 죄수는 누구? 왜 극단적 처형까지?



[영국 국왕 찰스 1세(1600~1649)의 처형 장면을 그린 그림]

○ 죄수명 : 영국 국왕 찰스 1세

○ 죄 명

- 국민을 타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속함.
- 아무 때나 억지로 세금이나 기부를 강요함.
- 권리청원(1628)의 약속을 어김.
- 의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11년 동안 의회를 열지 않음 등

○ 의 미 : 국민 주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국왕의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당시 국민들의 주권을 향한 투쟁과 간절함이 내포됨.

[부록 2]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미국 독립 혁명의 영웅 데보라 샘슨 1760~1826 (가명 : 로버트 샘슨)]

- 배 경 :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한 농장으로 보내져 그곳의 하인으로 어린 시절을 보냄. 국가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여성임을 숨긴 채 남장을 하고(로버트라는 가명을 사용) 미국의 독립 혁명군에 입대. 머리와 다리에 총상을 입었을 때는 자신이 여성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직접 자기 손으로 총알을 빼내기도 함. 이후 열병 치료 도중 여성임이 밝혀졌지만 군은 그녀를 명예 대원으로 제대시켜줌. 미국 의회는 그녀를 혁명의 영웅으로 임명함.
- 의 미 : 여성임에도 신분을 숨긴 채 군에 입대하여 주권을 되찾고자 자신을 희생한 숭고한 정신과, 그러한 정신에 담겨 있는 주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함.

[출처 : <http://library.thinkquest.org/>]

[부록 3]

인간 바리케이트와 총을 든 시민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부제-1830년 7월 28일 (들라크루아, 1830, 루브르박물관)]

- 배 경 : 프랑스 7월혁명을 주제로 한 작품. 인간 바리케이트와 오른쪽 총을 든 시민의 모습이 혁명의 치열함을 보여준다. 1830년에 제작되었고, 루브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들라크루아는 1830년 10월 18일 형 샤를 앙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에 관해 "나는 현대적인 주제, 즉 바리케이트전(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국을 위해 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썼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7월혁명에 대한 들라크루아의 관심은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애국심의 발로였다.
- 의 미 : 프랑스 7월 혁명 당시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시신을 바리케이트 삼아 투쟁하는 시민들이 모습 속에서 주권에 대한 열망과 소중함일 일깨워 줌.

[출처 : 두산백과]

[부록 4]

최초의 흑인부대 이야기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흑인지도자의 제안에 따라 흑인부대를 창설하고 그 지휘자로 로버트 골드 쇼 대위를 연대장으로 발탁한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부대였다. 단지 보여지는 이미지가 강한 수준이었고 전투력 차원으로는 생각지도 않았다.

당시 남북전쟁 중 로버트 골드 쇼 대위는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대령으로 진급을 시키며 이 영향력 없는 부대를 맡리게 된다. 부상당한 군인을 연대장으로 발탁할 만큼 당시 기대를 하지 않던 부대였다. 1000명의 흑인 자원자들이 로버트 골드 쇼 대령의 휘하에 부대로 들어간다. 흑인 부대라 상부기관에서의 대접도 엉망이었다.

소총은 물론이고 군화와 군복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꼭 '군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훈련에 임한다. 여기서 쇼 대령은 군수지원에도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상부기관과 부딪치며 보급을 받아낸다.

드디어 열심히 훈련한 끝에 남북전쟁에 출전하게 된다. 출전을 앞둔 퍼레이드에서 54연대는 자신들을 향해 환호하는 흑인들의 모습에 더욱 사기 충전한다. 자신들의 모습을 더욱 많은 흑인들이 알게 되기를 희망하며, '노예'에서 '군인'이 된 그들의 모습에 다른 흑인들이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 그동안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전장에서 흑인부대는 군 내부에서의 편견으로 주로 남부지역의 약탈업무에 투입된다. 약탈은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인데 백인이 하면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흑인부대가 하도록 지시한다. 흑인이 약탈을 하면 당연하다는 지도부의 생각이 깔려 있었다. 제대로 된 전쟁에서

의 역할을 하기 위해 쇼 대령은 지휘부와 부딪치며 약탈이 아닌 전쟁에 투입되도록 힘쓴다. 결국 첫 전투는 승리하게 된다.

난공불락의 와그너 요새. 당시 와그너 요새 주변에는 황량한 사막이라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모래언덕 밖에는 길이 없다.

이 공격의 선봉은 어쩔 수 없이 많은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54연대가 자원한다. 서로가 기피하던 선봉자리에 54연대가 자원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다른 흑인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선봉에 선 54연대는 죽음을 예감한 쇼 대령을 선두로 과감하게 공격을 시작한다. 피할 곳 없는 모래언덕을 올라가 와그너 요새를 공격하면서 연대의 절반정도가 전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여기서 쇼 대령도 전사하지만 여기에 흑인 부대원들은 자극을 받아 더욱 치열하게 전쟁에 임한다.

결국 와그너 요새 점령은 실패로 끝난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한 희생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데 54연대의 이러한 희생이 널리 알려지면서 북부지역의 폭동이 많이 줄어들고 도망간 흑인 노예들의 대규모 입대가 이뤄진다. 또한 그동안 백인부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월급과 군수품도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결국 이 전투로 미합중국 정식 부대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보스톤 내셔널파크에서는 로버트 굴드 쇼 대령과 54연대원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자유를 위해 싸운 노예들, 남북전쟁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그 숭고한 희생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을 노예가 아닌 동등한 가치있는 사람으로 대접하기 위한 씨앗이 된다.

[출처 : 영화 ‘영광의 깃발(1989)’]

[부록 5]

여성 참정권 전사 에멀린 판크허스트

1858년 오늘,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에멀린 판크허스트는 22살 때 24살 연상의 리처드와 결혼, 남편과 함께 여성 참정권을 위한 신념을 공유하고 행동에 나섰다.

1898년 남편이 죽은 후 여성사회정치동맹(WSPU)을 결성하고, 여성 참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한 '전투적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다.

여성 운동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라선 동료들을 추방, 독선적 면모를 보이면서 항상 급진적 입장을 취했던 판크허스트는 감옥을 들락거리며 단식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녀의 성장한 세 딸 크리스타벨과 실비아, 아델라도 어머니와 함께 여성 참정권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어머니가 '방화'를 시위 수단으로 선택하자 장녀 크리스타벨은 어머니를 지지한 반면, 실비아와 아델라는 이를 반대, 어머니 곁을 떠났다.

여성 참정권은 마침내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 허용되었다가 8년 뒤 전 여성으로 확대됐다.

과격한 방식이 논란을 낳기도 했으나 여성 참정권에 큰 영향을 미친 판크허스트는 1928년, 70세에 숨졌다. 결별한 뒤 사회주의자의 길을 걸은 두 딸과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

[출처 : 2004. 3. 25. 주간한국]

[부록 6]

(정책제안) 교통카드 단말기 추가 설치

□ 중·고등학생들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 대전시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

지난해 11월에 진행한 제2회 청소년환경대상 우수 아이디어들을 대전시 환경정책으로 적극 반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대전발전연구원은 작년에 진행한 '제2회 청소년환경대상' 환경행정 창안 경연대회 우수 아이디어들을 대전발전연구원의 전문가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검토해 지난 3월20일에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간해 대전시에 정식 제안하자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 (중략) ===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 상당수가 대전시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도 긍정적이지만, 그보다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환경정책행정에 참여 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환경대상은 대전충남녹색연합,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대전발전연구원이 주최해서 2010년에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작년에 2회 대회를 진행했고, 올해 하반기 3회 대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단순한 청소년 대회가 아닌 청소년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와 환경운동을 체득하는 장이 되고 있다.

학생들 제안에 대전시가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보여준 정책을 살펴보면, ○○중학교 그린과워 팀에서 제안한 시내버스 하차 단말기를 내리는 문양쪽에 설치해 하차 시 혼잡을 막자는 정책과 지하철역 입구의 계단에 칼로리 계단을 설치하는 정책은 반영추진한다고 했다. 하차 단말기의 경우 2013년 상반기에 전체 버스 비율의 61%를 설치하기로 했고 칼로리 계단 역시 현재 유성온천역에 설치돼 있는 것에 추가로 다른 역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올해 3회 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청소년환경대상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대전시 관계자들의 정확한 이해와 소통이 요구된다”며 나아가 제언된 정책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제3회 청소년환경대상은 2회 대회의 정책제언 검토결과 성과와 일부 정책 이해에 관한 한계점 보완을 바탕으로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환경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2012. 5. 27. 대전환경일보]

[부록 7]

(캠페인) 유기견 보호 활동

□ 청소년들이 유기견 보호 캠페인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는 9일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천사랑자원봉사단'의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유기견 보호 캠페인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역 청소년 15명으로 구성된 천사랑자원봉사단은 지난 5월 동물보호연대 주관으로 사전교육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에게 생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선견지명(先犬地明·우리가 먼저 유기견 보호에 앞장서서 지역사회를 밝게 변화시키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또래 청소년의 학교폭력, 자살, 동물 학대 등 생명 경시 풍조에 맞서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생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 교육 및 유기견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주변이다.

청소년들은 8월에 유기견 보호 자원봉사활동, 11월에 UCC 제작을 통한 홍보활동 등 프로젝트를 연중 진행한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학교폭력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시점에서 청소년 스스로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명 존중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2012. 6. 7. 연합뉴스]

[부록 8]

(합법적 시위) 최저임금 인상 활동

□ 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인상' 동시다발 1인 시위

청년유니온과 알바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 청년·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 학생단체 연석회의'는 3일 서울·인천 지역 대학 5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연석회의는 이날 정오부터 약 1시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 5명이 소속된 각 대학 앞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했다.

연석회의 회원들은 성신여대, 연세대, 성균관대, 상명대, 인하대 등 5개 대학 정문 앞에서 '○○교수님. 공익위원답게 책임지고 최저임금 인상해주세요', '○○교수님. 저희 시급 좀 올려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넘긴 지금까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공익위원이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노사간 중재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법정 시한인 지난달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시간당 최저임금 5천790원을 수정안으로 요구하는 노동계와 4천910원을 주장하는 경영계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수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출처 : 2013. 7. 3. 연합뉴스]

[부록 9]

(논 평)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

□ 18세 이상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참정권 확대 주장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가 논평을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한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 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춰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Y 관계자는 "입시와 등록금, 학교폭력,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이들이 국민주권의 상징인 선거권에 제약 받음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요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발급, 혼인적령, 병역법, 근로기준법, 공무원 임용법 등이 만18세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들의 법적 의무와 권리에 참정권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이다.

논평에 따르면, 전 세계 232개 국 중 92.7%인 215개 국에서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OECD 34개 회원국 중에도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거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 인하 조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한국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 혜택을 받음에 따라 정치적 판단 능력이 형성되는 나이도 빨라졌으며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또한 대학입시 및 정치화 등에 대한 부작용에 관해선 선거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 일이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출처 : 2013. 3. 2. 아이굿뉴스]

나와 맞는 정책 찾기

1. 제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가 가동된 지 오늘로써 닷새가 지났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는 기존에 운영하던 <후보선택도우미>와 <정당선택도우미>를 더욱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하였다. (<http://vote.ccej.or.kr>) 개편된 프로그램은 기존 운영하던 방식을 가져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20개의 질문 항목에 간단한 답변을 통해 정당들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의 일치도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정책선거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했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 지 5일 째인 오늘 오전 기준을 기준으로 7만명이 참여했다.
2. PC와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정책선거도우미에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해 호응을 보냈다. 정책선거도우미를 이용한 네티즌들은 자신과 각 정당의 일치도를 올리며 “나는 어떤당과 일치한다”, “헛갈렸던 각 당의 정책을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네요”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반면 “군소정당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별 중요도가 평가되지 않고 그저 일치하는 문항 수만 보고 있다” 등 프로그램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주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3. 정당들과 각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유권자 가정에 도착했다. 4.11총선에 20개의 정당이 등록하여 많은 공보물을 볼 수 있다. 후보가 많은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선거도우미는 간단한 방식을 통해 정당들의 정책 입장을 비교해 보는 유권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사이트 주소는 <http://vote.ccej.or.kr> 이며, 4월 1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실련바로가기

정책선거도우미란?
경실련 총선뉴스
헛공약월드컵
지난선거 도우미
참여우기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시작하기

참여우기

- 재미있네요. ㅎㅎㅎ... 2012-04-02
- [통합진보당34.78%/자유선진...] 2012-04-02
- 근데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여... 2012-04-02

헛공약 월드컵 실시간 중계 [3회]

[준비중]

-빠른시일안에 오픈하겠습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을 말한다.

m_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
3 days ago · reply · retweet · favorite

kimhd3433 경실련과 김원동의 실황중계 대안 마련 해결방안 마련했죠 우리모두 월모으면 주거 공간 주거문제 해결가능 @Sunpark04 부동산 기숙사서 못살아서 근처 월를 비싼 전월세 문제 부터 시작해서 신혼부부를

3 days ago · reply · retweet · favorite

11

K 경실련 총선뉴스

- 19대 총선, 나와 통하는...
- 경실련, 불법 선거홍보문...
- 경실련 '우리사회 4대 방...

법원 선거공보문지

정치 실는 선거홍보문지는 소...

젊은기사들의 일c

- 뜨거운 손수조...
- 안철수에 관한 불만한 건...
- 아직도 정치와 투표는 나...

경실련 회원님
아이디어를 만들어주

2012년 1월
경실련 총재이자가 개편하면
선거공약월드컵을 **실** 하였습니다
실시간 정보수령 및 회비조회
가능합니다.

> 자세히 보기

[출처 : 2012. 4. 6. 경제정의실천연합 보도자료]

토니블레어와 메니페스토

□ 1997년 영국 노동당의 메니페스토

영국은 더 나아질만한 가치가 있기에 이제는 새로운 노동당입니다

새로운 노동당과 함께하면 영국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영국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진력, 목표, 활력을 지닌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정책 각 분야에서 과거의 좌파 그리고 보수 우파와 차별화된 새롭고 특별한 접근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노동당이 새로워진 이유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아이디어와 이상으로 가득한 정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급진적이지만 방법은 현대적입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저는 영국을 믿습니다. 영국은 위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나라입니다. 영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국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병원, 범죄를 퇴치하고 현대 복지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그것입니다.

저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실력이 특권보다 더 우선시되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일하고, 국내외에서 강력하고 믿을만한 영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국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성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영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의 능력에 대한 국가의 믿음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정되지만 중요한 약속들을 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국가를 개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신 앞에 내놓는 10가지 개별 공약이 이루고자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도록 지지해주십시오. 그것들은 우리가 당신과 맺는 서약입니다.

저는 지난 18년을 공정히 평가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보수당이 잘 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일들입니다. 우리는 도그마(dogma)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잘 따르며 세금을 잘 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과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상위 소수 특권층에게 혜택이 가는 현 정치 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장차 살아야 할 새로운 경제체제와 변화된 사회체제의 혹독하고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서도 국가가 단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이 들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영국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공약으로 이루어진 메니페스토를 만든 것입니다. 메니페스토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를 믿어주시면 그러한 믿음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임무는 정부와 국민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번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영국국민에게 맹세합니다. 국민과 희망을 나누고, 국민의 근심을 이해하고, 소수의 특권세력만이 아닌 국민과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 노동당 정부의 향후 5개년 계획

1. 교육은 가장 우선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패한 경제와 사회 분야에 재정지출을 줄이고, 교육 분야에 지출을 늘릴 것입니다.
2. 소득세의 기본율 또는 상한율의 증가는 없을 것입니다.
3. 우리는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되고 경쟁적인 기업과 산업을 만들 것입니다.
4. 우리는 25만 명의 청년실업자에게 복지혜택을 중단하고, 직장을 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재정비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환자간호비용을 늘릴 것입니다.
6. 우리는 범죄와 범죄원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소년범이 재판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7. 우리는 튼튼한 가정과 사회를 건설하고, 연금제도와 지역보호시스템의 현대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8. 우리는 환경을 보전하고,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없애기 위해 통합된 교통 정책을 개발할 것입니다.
9. 우리는 정치를 정화하고, 정치권력을 영국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정당의 자금조달이 적절하고 책임 있는 토대위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10. 우리는 영국과 유럽이 필요로 하는 유럽에 대한 리더십을 영국이 행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당을 현대화했고, 영국을 현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든 결정을 해야 하고, 모든 공공부문이 자신의 수입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과 싸워야 되고, 불합리한 요구를 거부하기도 해야 합니다.

영국은 더 좋아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영국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출처 : 1997년 노동당 매니페스토 서문]

선거에서 '한 표의 의미와 가치'

□ 고성군수 보궐선거(2008. 6. 4) 단 1표 차로 당선



2008년 강원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 윤승근후보와 황종국후보 모두 똑같이 4천597표를 얻었지만 재검표결과 1표 차이로 황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1839년 미국메사추세츠 주지사선거에서도 현직 주지사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은 한 표 차이로 떨어지는 기막힌 선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그것도 본인의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탓이었다. 투표 당일 지지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다가 자신도 투표해야 한다는 생각에 투표소로 달려갔지만 5분이나 지각을 해 투표를 못했다.

□ 1표 차이로 역사를 바꾼 사례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유권자 투표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다. 따라서 말이나 글로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쳐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1표 차이든 100만표 차이든 선거 결과는 같다.

선거제도가 생긴 이래 1표 차가 역사를 바꾼 사례가 적지 않다.

- 영국 국왕 찰스 1세는 의회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권리청원이 제출되자 의회를 해산하고 11년간 소집을 중단한다. 1645년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임시의회를 소집했다가 크롬웰이 속한 의회와 대립하고, 끝내 청교도혁명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의회 표결에서 91대 90, 1표 차로 총사령관에 임명된 크롬웰이 찰스 1세의 처형을 주도한 것. 1649년 찰스 1세의 운명을 가른 재판 결과도 공교롭게 68대 67로 1표 차였다.
- 영어가 미국의 공식어로 단독 지정된 것도 1표 때문이다. 1794년 3000여개의 연방 법률을 영어와 독일어로 반포하려는 하원의 표결이 찬성 41표, 반대 42표로 부결된 것. 건국 당시 미국엔 독일계가 잉글랜드계보다 훨씬 많았다.

- 1800년 미국 하원에서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은 1표 차이로 당선됐고, 1824년 잭슨과 존 퀸시 애덤스가 겨룬 제6대 대통령 선거 역시 1표 차로 애덤스가 승리했다.
-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에드워드 에버렛 주지사는 투표를 독려하다 정작 자신이 투표장에 5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1표 차이로 패했다.
- 1868년 앤드루 존슨 미국 제17대 대통령은 1표 때문에 탄핵소추를 모면했다.
- 1875년 프랑스에선 왕정당 의원 한 명이 배앰으로 불참하는 바람에 1표 차이로 제3공화국이 성립됐다.
- 1945년 텍사스를 미국 영토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한 의회 투표도 1표 차이로 가결됐다.
- 세계를 참화로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는 1923년 1표 차로 나치당 당수가 됐다.
- 1954년 한국의 사사오입 개헌과정도 3분의 2인 136표에서 한 표가 모자라 생긴 일이다.

[출처 : 2013. 10. 15. 세계일보]

□ 단 1표차로 미국의 공식언어가 된 영어

전 세계 공용어라고 불려도 무리 없을 듯한 영어. 이 영어는 어떻게 미국의 공식언어가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영어는 언제나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에서 중심에 위치해 있었어요. 처음에 미국 땅에 정착하여 미국을 건국한 영국인들은 그들의 언어인 영어를 각급 정부관서의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원래의 모국어를 사용했지요.

이들 초기의 비영국계 개척 이민자 집단들은 모국어의 사용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영어는 언제나 2세대와 3세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언어의 존재는 정부의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통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곤 했죠. 그리하여 새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미국의 정부·기업·교회·사회복지 조직들의 중심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영국계 주민들과 주요 지방 정부들은 유럽 대륙 출신 이민자들이 각기 자신의 모국어 사용을 계속할 경우 미국이 몇 개의 언어권으로 분열될 것을 우려했고, 그리하여 이들에게 영어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각종 법과 규정들을 제정했습니다. 특히 2세 교육을 영어로 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위스콘신 주입니다.

19세기 중엽에 위스콘신 주 주민의 1/3 이상이 비영어권 출신으로 이들은 모두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노르웨이·폴란드·네덜란드·스위스·독일계 주민들은 따로 학교를 설립하여 2세 교육을 각기 모국어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주 정부는 특정 과목에 한해서는 영어로 교육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 뒤 1889년 '베네트 법(Bennett Law)'을 제정하여 모든 과목을 영어로 교육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어 교육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다른 언어가 영어를 대신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뮐렌버그 전설(Muhlenberg legend)'입니다.

이것은 1794년 버지니아의 독일 출신 이민자들의 노력에 의해 3,000여 개의 연방 법률들을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로 반포하자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안되어 찬성 41표, 반대 42표라는 단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사건입니다. 이때 이 법안이 부결되지 않았다면 독일어가 미국의 공용어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최근까지 미국인들은 한 번도 진정한 국민 언어를 갖지 못했고, 언어 통일을 위한 노력 또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자국어의 선택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에, 영어가 미국의 언어로 자리 잡은 이유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영어 사용을 유도했다기보단 영어가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영어는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실리적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즉, 프랑스인들이 프랑스어에 애착을 갖는 것과 같은 모습은 미국인들에게선 볼 수 없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서서히 영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캘리포니아 주 출신 연방 상원의원 하야카와(Samuel Hayakawa)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선언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년 후인 1983년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단체인 '미국 영어(U.S. English)'를 조직했고, 1986년에는 '영어 우선(English First)'이라는 단체도 생겨났습니다. 이들 단체를 주축으로 미국의 주 내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히스패닉계를 비롯한 소수파 언어 집단들과 진보적 및 민권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운동의 노력에 의해 버지니아 주는 1996년 4월 10일 영어를 버지니아 주의 공식 언어로 선언했고, 뒤이어 다른 주들도 영어를 그 주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6월 30일, 연방 하원은 영어를 연방 정부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영어는 다수의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영어가 미국의 공식 언어로 채택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았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출처 : 살림지식총서 262, 김진웅, 2006.10.30, (주)살림출판사]

선거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모습들

□ 조지아 한인회, 재외대선 투표 위해 2박 3일 터키행

- 공관 없어 터키 앙카라 대사관에서 투표 -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무려 왕복 2천 700km를 운전해가는 사람들이 있다.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 조지아(그루지야)의 한인들이 그 주인공이다.

조지아 한인회 이광복 회장과 이강규 총무를 비롯한 한인 9명은 12인승 승합차를 빌려 타고 6일 오전 5시(현지시간)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를 출발해 재외국민 투표소가 설치된 터키 앙카라의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트빌리시에서 앙카라까지는 육로로 1천350km, 국경을 통과하시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도착하는 데에만 20~22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다.

이광복(42) 회장은 출발 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관이 없는 조지아에는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관할 대사관인 주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 유권자 등록을 한 상태"라며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대신 비자가 필요없는 터키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조지아에는 기업 주재원을 포함해 40~50명가량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권자는 30명가량으로 추정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13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전체 재외국민 투표 등록률 10%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 실시된 지난 총선 때에는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번이나 아제르바이잔에 가야 했던 탓에 한 사람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이 적용되는 이번 대선에서는 공관 직원의 순회 접수가 가능해져 아제르바이잔에 가지 않고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 꼭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서 멀어도 투표를 하러 가기로 했다"며 "조지아 자유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계로이(79) 교수 부부께서도 꼭 투표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며 고령임에도 장거리 여행에 동행하기로 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출발한 '투표단'은 교대로 운전대를 잡으며 쉬지 않고 달려 밤늦게야 앙카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7일 투표를 마치고 8일 늦게야 다시 조지아로 돌아오게 된다.

비철금속 사업을 하는 이 회장을 포함해 모두 투표를 위해 생업을 잠시 접어야 한다.

이 회장은 "투표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정책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며 "국내 유권자들도 의무이자 권리의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2. 12. 6. 연합뉴스]

□ 산소통까지 달고 '감동의 한표'...폐암말기 에스더 오씨 '휠체어 표심'

한국 대선 재외선거 투표 첫 날이었던 5일 LA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장을 찾은 에스더 오씨가 산소통을 단 휠체어를 탄 채, 남편 오문환씨의 도움을 받아 투표함에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살아 있어 투표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에스더 오(56.LA)씨는 5일 산소통을 단 휠체어를 타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겉으로 보기에 병색이 완연한 오씨는 전날부터 남편을 재촉했다. "내일 아침 총영사관 투표소가 문을 열자마자 가서 투표합시다."

자녀들은 말렸다. 산소통 없이는 호흡이 곤란한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의지는 강했다.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투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하고 싶다고 했지요. 유권자 등록도 아이들이 대신해 줬어요. 몸이 힘

들어서 할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휠체어에 산소통을 달고 가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다 정 힘들면 다시 집에 돌아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한 표라도 더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요 권리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도 투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투표를 마친 그를 더 인터뷰하고 싶었지만 산소통의 산소가 거의 다 소진돼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남편 오문환(59)씨가 귀가를 서둘렀다. 주차장까지 따라나가 차에 오르는 남편으로부터 집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2시간쯤 뒤 전화를 걸었다. 오씨와의 인터뷰는 그렇게 계속될 수 있었다.

"정말 하고 싶었는데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우리나라가 잘되어야지요."

오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들게 대답을 이어갔다.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몸을 이끌고 투표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다.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화를 끊었다.

생애 마지막 투표가 될 수도 있는 18대 대통령 재외선거 그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과 조국의 미래를 한 표에 간절히 담아 대한민국에 전달했다.

[2012. 12. 6. 미주중앙일보]

□ 100세 어르신들 노익장 '과시'

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전북지역에서는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몸소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노익장을 과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제1투표소에는 전주 최고령 투표자인 허윤섭(102)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투표소를 찾았다.

그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왔다"면서 "오늘도 날이 춥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투표하러 왔다"고 말했다.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느냐는 질문에 허 할아버지는 "TV토론회도 모두 지켜보고 주변 여론도 참고해 결정했다"면서 "일 잘하고 서민을 위하는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껏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를 1948년 제헌국회의원선거로 꼽으며 "당시에 빨치산으로부터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 군과 경찰이 투표소를 지켰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허 할아버지 외에도 이날 진안군 안천면 김입분(103) 할머니, 무주군 적상면 양영섭(97) 할아버지 등 고령 투표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 열기를 돋웠다.

[2012. 12. 19. 연합뉴스]

□ 장애인들 "몸 불편해도 투표는 해야죠"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19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았다.

이날 오전 6시50분께 서울 중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광호(48)씨가 안내도우미의 부축을 받으며 명동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명동 제1투표소에 들어섰다.

투표용지와 시각장애인용 점자용지를 받아든 이씨는 5분여간 투표를 한 후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투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며 항의를 했다.

이씨는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에 도장 찍는 칸이 너무 좁아 도장을 맞춰 찍기가 너무 어렵다"며 "선관위에 몇 번씩 항의를 했는데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어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도 투표를 빼먹은 적이 없다"며 "요즘은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서 시각장애인들도 대부분 투표를 한다"고 말했다.

선천성 소아마비 장애인인 김재원(40)씨도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2문화센터에 마련된 논현2동 제2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투표소까지 가파른 길을 혼자 올라 온 김씨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전동휠체어를 모느라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김씨는 "날씨가 춥고 이동하기도 쉽지 않지만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표하러 왔다"며 "지난 총선 때에는 투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만큼은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 대통령에겐 무엇보다 장애인 복지확대를 부탁드립니다"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2. 12. 19. 연합뉴스]

참 고 문 헌

[교과서 및 단행본]

- 권영성, 1994, 『신헌법요론』, 형설출판사.
- 서태열 외 9인, 2011, 『고등학교 사회』, 금성출판사.
- 윤용탁 외 10인, 1996, 『고등학교 정치』, 한국교육개발원.
- 이극찬, 2006, 『정치학』, 법문사.
- 이효건, 2013, 『청소년 정치의 주인이 되어 볼까요』, 사계절.
- 하승우, 2011, 『도시 생활자의 정치백서』, 북하우스.

[논문 및 기고문]

- 배명선, 2012, “20대 투표참여와 기권 : 19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율 분석을 중심으로”, 『선거연구』 제3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갑윤, 2008,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제14권 2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이정교·하승태 공저, 2012,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이용 유형이 이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청소년 연구』 제23권 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현아, 2012, “청소년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 지병근, 2013,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참여 결정요인의 연령별 다양성”, 『선거연구』, 한국선거학회.
- 최연혁, 2010, “스웨덴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시민교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종호, 2011, “인터넷과 정치관심. 그리고 투표형태”, 『평화연구』 제19권 제2호,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